

(1)일본측에서 한국측에 질문

【질문 1】

한국에서는 1962년도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어 왔습니다만, 2011년3월29일에 「개인번호보호법」이 제정(2011년 9월30일 부 시행)되기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밖에 없었습니까?

【회답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부터 제40 조(과태료)에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며, 2008년12월6일 이후 다섯 번에 걸쳐 법을 개정하였고 법을 위반한 때에는 상응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2000년도 후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1년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2013년도에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2014년도에 주민등록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 2015년도에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고, 올해 3월에는 개인정보수집 출처를 고지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질문2】

2. 주민등록법의 (3)신고사항에 있는 「등록기준지」란 무엇입니까?

【회답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를 살펴보면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를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의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주2)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 1 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 1 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주2) 조선반도에서 본관이란, 발상이 같은 동일 부계 씨족집단의 발상지 혹은 종족자체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조선왕조시대 이후, 사회적, 법적인 위치가 가족제도의 중요요소로 자리 잡았다. 현재에도 한국에서는 성과 함께 본관을 사용하고 있다. 생략하여 「본」이라고 해도 좋고, 그 외 「관향」으로 부르기도 한다.

【질문 3】

2. 주민등록법의 (6) 주민등록증발행에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기관」이란 어떤 기관입니까

【회답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기관은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을 의미합니다.

【질문4】

5. 개인정보보호법의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추진과정②에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2011년 1년간 발생한 건수를 합계하면 한국의 전체 인구를 초과할 정도의 숫자입니다만,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구제 조치는 있었습니까?

【회답4】

지난5월 온라인 쇼핑몰인 인터파크의 데이터베이스(DB)서버가 해킹 해 회원 1,030만 여 명의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수사중이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회원정보 1억 건 이상이 새나간 사건으로 수사결과 용역업체 개발자가 카드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구제조치로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본인의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경우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조정 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작성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일본에서의 지방공공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지방공공단체는 어떻게 구분되니까?

보통지방공공단체 (조직, 사무, 기능 등이 일반적, 보편적인 것)	都(도)道(도)府(부)県(현)			
	시 읍 면	(시행령)지정도시	인구50만 이상의 市중에서 시행령에서 지정 (현재20市)	지사로부터 승인, 허가, 인가 등의 사무로서 직접 市가 행한다.
		핵심도시	인구20만 이상의 도시로서 신청에 의거 시행령에서 지정	복지사무에 한하여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시와 같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시행시 특례도시	특례도시 제도의 폐지(2016년4월 1일 시행)시, 현재 특례도시인 도시	없음
		그 밖의 시	인구5만 이상	
	읍 면			
특별지방공공단체	특별구	대도시의 일체성 및 통일성확보 관점에서 도입 동경도		

【회답5】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광역자치단체

(1) 특별시: 서울특별시

*국무총리 직할이며, 25개 자치구를 두고 있다.

(2)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광역시는 15자치구와 1개 군을 두고 있다.

*설치요건에 법적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 명 상회 후 설치

*지방자치법상 하급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3) 특별자치시: 세종(世宗)특별자치시

(4) 도: 경기도외 6 개도

(5)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 기초자치단체

(1) 시·군·구

시, 특정시, 행정시, 군, 자치구, 일반구

*시는 대부분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읍·면·동

읍, 면, 법정동, 행정동, 로(路), 가(街),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리·통

리(里), 통(統)

5 촌·반

촌(村), 반(班)

【질문6】

일본의 개인번호카드에는 유효기한이 있습니다만(발행일 이후 10년 이내 의 생일까지), 주민등록번호는 유효기한이 있습니까?

【회답6】

유효기한은 없습니다. 분실하여 재교부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2) 한국측에서 일본측에 질문

【질문 1】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의 개인번호 12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회답 1】

개인번호 12자리 중 왼쪽의 11자리는 주민표에 기록되어 있는 주민표코드 의 변환으로 생긴 번호입니다. 마지막 1자리는 검사용 숫자이며, 왼쪽의 11자리 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주민표 코드는 무작위로 작성된 숫자입니다.

【질문2】

법인번호 13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 법인번호만으로 그 법인의 연도별매출내역 및 납세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요?

【회답2】

법인번호 13자리 중 왼쪽의 1자리는 검사용 숫자입니다. 왼쪽의 1자리를 뺀 12자리는, 일본에서 설립등기를 한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의 회사법인 등 번호 12자리와 일치합니다. 그 이외의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회사법인 등 번호와 구별할 수 있도록 12자리의 숫자가 정해집니다.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사이트」에서는, 법인번호, 상호·명칭, 주소 등 3가지 정보를 공표합니다. 매출금액이나 납세상황 등에 대하여는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3】

개인번호카드에는 IC칩이 부착되어 있어서, 자동발급기에서 이 카드로 주민표나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공적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인감증명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그 피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자동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때 본인의 지문을 대조한 후 발급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거나 혹은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답3】

이용자증명용 전자증명서가 부착되어 있는 개인번호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시, 구, 읍, 면의 창구 이외, 편의점의 다기능 단말기에서, 주민표를 복사하거나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호적초본, 호적부표의 복사, 각종증명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전자증명서와 비밀번호 4자리 숫자입력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개인번호카드의 IC칩 안에는 필요한 최저한의 정보만 기록되어 있으며, 조세정보나 연금급부정보 등 프라이버시적인 높은 개인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